

# 학원없는 신안 학생들이 'EBS 올인' 적중

## 언어영역 표준점수 향상도 전국 최고 '화제' 합평 수리나·외국어 3위, 장흥 수리가 5위 '교육 특구' 광주 남구 전 영역서 30위 이내

2011학년도 수능능력시험에서 교육 기반이 취약한 신안군의 언어영역 표준점수 향상도가 전국 최고로 나타나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발표된 2011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의 평균점수 향상도에서 삼지역인 신안언어영역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5점이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 증평군과 경북 청송군도 8.8점과 7.3점을 뒤를 이었다. 높은 성과를 일궈낸 신안의 교과는 도초·비교·하의·안화·압해·임자·지명고 등 7개교다.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거둔 성과여서 공교육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언어영역에서 EBS수능 관련 방송 청취율과 효율성을 높인 교육이 주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신안지역 각 학교들은 언어영역의 경우 외국어, 수학과 달리 방송 청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전적으로 언어영역 교육에 총력을 쏟았다고 한다.

이들 교고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부족한 어휘력을 길러주기 위해 수업시간에 EBS언어영역 방송을 청취하게 한 뒤 수업시간에 EBS교재로 강의

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며 "일주일 3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하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구 표준점수 상위 30위안 내 장성이 전 영역 부동의 1위로 눈길을 끌었으며 해남, 담양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표준점수 평균이 향상된 30개 지자체에 합평군이 수리나 6.3점, 외국어 6.1점으로 각각 3위를, 장흥군이 수리가(10.8점)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성적이 두드러졌다.

1,2등급 비율이 증가한 상위 지자체에서도 장흥과 담양 등이 전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등 성적

이 크게 향상됐다.

광주지역은 수능 성적이 7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한 가운데 표준점수 기준 상위 30개 시군구별 평가에서 언어영역의 경우 남구가 12위, 북구 20위, 서구 26위, 동구 30위 등에 포함됐다.

수리가 영역에서는 서구(16위), 남구(22위), 북구(27위)가, 수리나 영역에서는 남구(6위), 북구(20위), 서구(24위)가 30위에 들었다.

외국어는 남구(11위), 북구(18위), 서구(19위)가 포함되는 등 남구는 전 영역에서 30위안에 포진, 교육특구의 명성을 입증했다.

특히 전 영역 30위 포함 지자체 16곳 가운데 남구, 서구, 북구 등 3개구가 포함됐으며 이들은 2년 연속 포함되는 영예도 안았다. 1·2등급 상위 30개 시군구에서도 언어는 남구(18위)와 북구(30위)가, 수리나와 나서는 서구(19위), 남구(17위), 북구(28위), 외국어는 남구(18위) 등이 포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취업 청탁 광주시의원에 돈 줬다"

### 광주지검에 고소장 ... 일간지 기자 2명도

인사 청탁을 대가로 현직 광주시의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4일 차모씨가 "취업 청탁을 대가로 A광주시의원에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차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7년 취업 부탁과 함께 고향 선배인 A의원에 현금 300만원을 건네고, 수차례 향응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또 "5년 전에는 A의원과 브로커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넸고, 최근에는 '일이 안되면 돈이라도 돌려달라'는 부탁조차 외면당했다"고 했다.

차씨는 A의원 외에도 브로커 C씨, H일보와 J일보 등 지방일간지 광산주 제 기자 2명 등 모두 4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향 후배의 순수한 호의일 뿐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의원은 또 "검찰조사에서 모든 진실을 펴뒀지만 한편, 차씨에 대해선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31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학교매점 위생 점검

30일 학교 매점 위생점검에 나선 광주 북구 공무원과 소비자 감시원들이 두입동의 한 학교 매점에서 과자·빵·라면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북구 보육시설에서 한살배기 여아 숨져

30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보육시설에서 한 살배기 여아(여)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시설 직원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보육시설 직원은 경찰에서 "아이가 의식이 없고 옷에 구토 흔적이 있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이 영이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이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경찰은 보육시설 직원과 유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인의 부검을 의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여론조사 문자메시지 발송 전남경찰, 40대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은 30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Y(4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감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7일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B(41)씨 등 유권자 6명에게 A씨가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A씨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B씨 등이 이번 4·27 보궐선거에서 경쟁 후보자의 캠프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교육청 공사 수의계약 비리 교장 등 10명 곧 소환

'광주시 각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은 30일 "각 학교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일부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A교장 등 관련자 10명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교장 등이 해당 학교 공사 수의 계약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관여하면서 수의 계약을 맺은 공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대가성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대가성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이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비리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받은 뇌물 금액과 수수 횟수 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가급적 다음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입건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광주시 초·중·고 150곳에 공문을 보내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0만~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황주홍 군수·공무원 10명 혐의 확인"

### 광주경찰, 내일 소환

강진장학재단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이 황주홍 강진군수를 포함한 관계 공무원 10명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황 군수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소환하는데 이어 공무원 10명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형사입건을 의미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관련 공무원을 소환하고 그 범위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 증거들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황 군수가 기금 조성에 직접 개입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는지, 군과 각종 계약을 맺은 기업체 대표들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장학금 일부를 체육진흥 기금으로 전용한 의혹과 일부 장학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승진 대가로 장학금을 기탁했거나 건설업자들이 공사 관리 또는 감독 편의를 대가로 장학금을 낸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8281) 김종두



## 금당산불 잡목 태우다 발생 서부경찰, 60대 여 입건

지난 29일 발생한 광주시 서구 금당산 화재(광주일보 3월30일 6면)는 60대 여성이 밭고랑에서 잡목을 태우던 중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서부경찰은 30일 밭고랑에 모아 둔 잡목을 태워 산불을 낸 정모(여·61)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씨처럼 불이 산으로 옮겨 불이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10억 청자 결국 바가지?

### 검찰, 뒷돈 받고 가격 부풀린 감정위원 영장

강진군이 고려청자 두 점을 10배 가량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한 의혹(광주일보 2010년 12월 25일 3면)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감정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 창)는 30일 조선관요박물관장 최모씨에 대해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알선수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청자상감 모란문 정병' 한 점과 '청자상감 모란국화 연화문 과형주자<사진>' 한 점 등 두 점의 고려청자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청자 소장자로부터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군의 강진청자박물관은 문제의 고려청자 두 점을 최씨의 감정평가를 토대로 각각 10억원 씩 총 20억원에 사들였으나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바가지 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당시 "고려청자의 실제 감정가가 개당 1억원도 되지 않는데 감정위원과 소장자가 짜고 감정가를 10억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진군은 의혹을 풀기 위해 감정위원과 소장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관련자 8명 전원은 지난해 5월 '무혐의'처리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다시 감정위원과 청자 소장자 간 금품거래 정황을 포착, 서울중앙지검에 제수사를 의뢰했다.

/연행뉴스

## 점포 앞 가로수 뿌야 옮겨 심어

○자신의 점포 앞에 심어둔 가로수 물레 뿌야 다른 곳에 옮겨 심은 40대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행.

○3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농·축산물 판매점을 운영중인 주모(43)씨는 지난 28일 밤 9시40분께 자신의 점포 앞 인도에 심어져 있던 남구청 소유 이팝나무(높이 4m·지름 8cm) 한 그루를 10m 가량 떨어진 아파트 화단에 옮겨 심었다는 것.

○구청 측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가로수를 옮겨 심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주씨는 경찰에서 "나무 때문에 과일 상자를 쌓아두기가 불편해서 옮겼는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